

5·18 왜곡 없도록 40년 감춰진 진실 반드시 밝혀야

풀어야 할 5·18 미완의 과제

광주시 접수·인정 받은 78명
행불자 규모·소재 파악 시급
교도소·무기고 피습 사건 진상
계엄군 성폭력 추가 조사 필요

◀ 6면에서 계속

◇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40년간 풀리지 않은 5·18 핵심 의혹이 바로 '행불자와 암매장지' 문제다. 암매장을 비롯한 사체의 유기 여부를 규명하고, 그에 따라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행방불명자로 광주시에 보상신청을 접수한 건수는 모두 448건으로 중복 건수를 제외하면 모두 242건이다. 이 중에서 인정된 행방불명자는 84명에 그친다. 84명의 행방불명자 중에서 유전자 검사와 가족들의 유전자를 대조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가 6명, 유전자 검사결과 확인 후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5명으로 결국 가족 겉으로 돌아가지 못한 행방불명자는 78명에 달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 등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고, 단 한차례의 공식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의 민간단체에서 '5·18행방불명자 소재 찾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차례 암매장지 발굴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발굴은 무명묘사묘에서 찾은 6명(권호영, 양희영, 채수길 등)에 불과했다.

그동안 행불자로 인정받지 못한 유가족들의 대부분은 서류준비(인우보증인 확보 등)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첫 보상접수가 5·18이 10년이나 지난 뒤, 199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행불자 접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유가족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 당시 피해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숨어 살았던 유가족들도 있었다.

불인정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단 한 명의 행불자라도 소재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인 사망과 관련된 군기록과 공식 확인된 사망자를 교차 확인하는 작업, 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활동된 사진·영상물 등에 등장하는 사망자 명단, 시신 영상자료를 분석해 공식 인정된 사망자와 대조하는 작업 등도 진행돼야 한다. 또 지난해 김용장씨 등이 증언했던 '광주 국군통합병원 소각장 시신 소각설'과 언론 등에 제기된 '사체해양투기설' 등의 진실도 밝혀야 할 과제이다.

◇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은 지난 2018년 피해당사자들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고, 계엄군의 성폭력을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2018년 6월~10월까지 국가인권위·여성가족부·국방부는 '5·18 계엄군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꾸려 공동조사를 진행, 성추행·성고문 등 17건의 성폭



국립 5·18민주묘지 내 유영보관소를 찾은 한 가족이 영정사진을 보며 고인들을 추모하고 있다.

력 피해와 45건의 여성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하지만, 40년의 세월 동안 은폐됐던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이 5개월 간의 조사로 모두 밝혀지기에는 부족했다. 실제로 조사단에 접수한 피해자 중 광주시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았으며, 문현 자료 등에 따르면 한 번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공동조사단 기간중 이뤄진 피해신고 12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가해자·가해부대를 특정했으나 조사가 미진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월 19일 유동삼거리에서 납치된 인근 백운동 야산에서 성폭행당한 사건에는 7·11공수여단 부대 관계자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월 20일 천수당 약국 골목에서 발생한 사건과 같은 날 전남여고 후문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 같은 날 기울릭센터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도 같은 부대 관계자로 보인다.

5월 23일께 맘월동 검문소 및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3공수여단 병력이 지목되기도 했다.

또 2018년 조사단의 조사는 성폭행·성적 가혹행위 등 성적 문제와 관련된 인권침해 행위에 국한됐고, 구타·욕설 등 일반적 폭력행위는 조사범위상 검토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조사 범위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인권침해 행위로 확장한다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인권침해 행위는 훨씬 광범위한 수준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 탈북자의 북한 특수군 광주침투 주장

40년동안 5·18민주화운동은 왜곡·폄훼에 시달렸다. 그 왜곡과 폄훼의 중심에는 '북한군 투입설'이 있다. 40주년을 맞는 올해에도 왜곡·비방 사례가 SNS와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지만원씨 등은 중심으로 끊임없이 확산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설의 진실이 밝혀 더 이상의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먼저 5·18 당시 북한군 특수군으로 땅굴 등을 통해 직접 남파했다고 주장한 탈북자 임천용씨, 광주에 남파된 북한특수군의 체험담을 저술한 탈북자 이주성씨, 북한 청진시에 5·18 남파 북한군묘역이

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 김주호씨 등에 대한 대인 조사 및 이들의 주장을 보도한 종편과 각종 영상관계자들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들 외에도 1980년 당시 광주에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탈북자들과 이들과 같은 주장은 펼치는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동시에 1980년 당시 북한군 관련 정보 및 한반도 안보상황, 한미연합사·정보기관 등의 관련 기록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5·18 당시 남파 간첩 수사기록 등 관련 대공기록 조사와 5·18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 보안사 등 군·경찰 관계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병행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더불어 당시 보안사에서 기록한 '전남도경 상황 일지'에 기록된 피탈 시점과 지점 등이 경찰 자체자료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어 '보안사 511대책반'의 자료 변조 및 날조 의혹 가능성이 높은 점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또 집단발포 시기는 가해자들이 '시민군의 선제 무장과 공격에 따른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이 억지이며, '계엄군의 집단발포 이후 시민군의 무장'이 뒤따랐다는 시민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이에 각 피습사건에 대한 발생 경위, 사건과정, 각 피습 시간 및 장소, 탈취된 무기 종류 및 수량, 군경 관련자, 시위대 가담자, 목격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면서 무기고 탈취에 직접 가담한 사람들을 조사해 당시 수사기록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 당시 각 시·군·구 보안사, 시민군의 무기 자진반납 관련 전남도경 관계자와 정보과·대공과·직원 등 사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진실에 다가가야 할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내 행방불명자 묘역 너머로 2020년의 새로운 해가 따스한 기운을 뿜어내며 떠오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